

■ 특집논문 ■

지역문화정체성과 하동

지역 만들기와 커먼즈 논의 확장의 가능성 | 조명기
— 경남 하동군을 중심으로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나타난 섬진강과 송화강의 | 조윤아
지역성 연구

지역 만들기과 커먼즈 논의 확장의 가능성*

— 경남 하동군을 중심으로

조명기**

| 국문초록 |

이 글은 현재 경남 하동군의 재지역화 양상을 살피고 커먼즈 논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로 소규모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커먼즈 논의의 폭을 좀 더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하동의 경계는 지리산, 섬진강, 남해라는 국가 관리의 자연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계는 주변 지자체들 그리고 국가의 욕망이 개입하는 현상이다. 특히, 경계공간·사이공간인 지리산은 커먼즈의 비극의 현상이 되어 있다. 반면 섬진강이라는 경계공간에 대한 태도는 지리산의 그것과는 다소 달라 보인다. 섬진강권 지자체들은 2020년 홍수라는 공동의 재난을 경험하면서 배타적 경쟁이 아니라 호혜적 협력을 추진한다. 물론 이 기획은 친자본주의적 커먼즈라는 점, 커먼즈라는 공통재화 이익의 개별 환수라는 한계를 보이지만, 인간중심적 인식에 대한 반성과 비자본주의적 실천을 제안하는 시민단체 활동으로 인해 질적 변모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하동의 지리산은 이미 이런 변화를 잠재태로 내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동의 귀중한 문화자산인 소설 『토지』는, 국제 슬로시티로 인정받은 악양면의 평사리를 자본주의적 소유 욕망의 대상으로 그리면서도 지리산을 화해·생명의 공간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이미 하동은 박경리라는 공동자원을 여타 도시와 공동-개별화하는 커먼스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어: 경남 하동군, 커먼즈, 지리산, 섬진강, 소설 『토지』

* 이 논문은 2021년 8월 21일 토지학회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 『하동과 지역인문학 연구』에서 발표한 「하동 만들기과 커먼즈(communs)」를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교수(ftw123@pusan.ac.kr)

| 차례 |

1. 들어가며
2. 유일성과 경계공간에 대한 배타적 독점 · 선점
3. 지리산과 섬진강: 커먼즈의 비극 혹은 친자본주의적 커먼즈
4. 커먼즈의 이중성과 가능성
5. 나오며

1. 들어가며

북쪽으로는 지리산을 경계로 경상남도 산청군과 함양군, 전라북도 남원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남도 광양시와 구례군과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경상남도 진주시와 사천시, 남쪽으로는 남해 바다를 경계로 남해군과 접하고 있다.¹⁾

인접지역과의 경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때 하동은 동쪽을 제외하면 굽직한 자연물들을 먼저 거론한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는 하동과 2개도 · 8개 시군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공간으로 제시된다. 이 경계공간들은 지역이라는 하위 공간이 아니라 국가 스케일에서 주요 자연경관으로 지정(지리산국립공원, 섬진강국가하천, 한려해상국립공원)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동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중요한 자연물 ·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인 공간이다.²⁾

이 경계공간들은 국가 스케일에서 직접 관장할 정도로 그 규모와 중요

1) 디지털하동문화대전, <http://hadong.grandculture.net/hadong/toc/GC03400195>
(검색일: 2021.07.05.)

2) 하동은 자신을 “장엄하게 우뚝 솟은 지리산 국립공원과 맑고 푸른 섬진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산자수려한 자연과 임진왜란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최후 승전장이었던 한려해상국립공원, 청정해역의 노랑 앞바다 등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고장”이라고 설명한다.
<https://www.hadong.go.kr/intro/00567/00578.web>(검색일: 2021.07.05.)

성, 매력도 등이 뛰어나기에 인접지역들 또한 자신을 소개할 때 거의 어김 없이 이 경계공간들을 등장시킨다. “서부는 천왕봉을 기점으로 한 지리산 맥이 남·북으로 질주하여 하동, 함양군과의 경계를 이루고”(산청)³⁾, “소백산맥의 최고봉이며, 영남의 진산(鎭山)인 지리산을 남쪽에 두고 있다”(함양)⁴⁾, “시의 동남쪽은 지리산의 주 능선을 경계로 경남 하동군 및 전남 구례군과 (중략) 남쪽의 일부는 섬진강을 경계로 전남 곡성과 접하고 있다”(남원)⁵⁾, “우리는 지리산의 높은 기상과 섬진강의 푸른 이상을 안고”(구례)⁶⁾ 등 광양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자체 홈페이지는 지리산, 섬진강, 남해 등을 언급한다.

국가의 기획·의지가 직접 작동하는 이 경계공간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분할하고 구획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개발하려는 자치지역의 욕망들은 이 경계공간 안에서 충돌하거나 타협하게 된다. 일종의 사이공간⁷⁾이라 할 수 있는 이 경계공간은 국가[公]의 소유·관리공간이면서 이 경계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층위의 많은 행위주체의 (비)물질적 욕망들이 발현되고 수행되면서 충돌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일정한 체제가 생성되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하동군을 포함하여 2개 도·8개 시군의 자기소개에 이 경계공간이 영락없이 등장한

3) 산청군청 홈페이지, <https://www.sancheong.go.kr/www/contents.do?key=168>
(검색일: 2021.07.05.)

4) 함양군청 홈페이지, <https://www.hygn.go.kr/country/00780/00839.web>
(검색일: 2021.07.05.)

5) 남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namwon.go.kr/index.do?menuCd=DOM_00000020500000000000(검색일: 2021.07.05.)

6) 「구례군민현장」, <https://www.gurye.go.kr/kr/subPage.do?menuNo=116007004000>
(검색일: 2021.07.05.)

7) 사이공간은 본질론, 선험론, 이원론, 환원론이 아닌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적 관계와 생성과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 혹은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다. 여기서 수행적 관계는 상이한 (비)물질적 힘이 접촉 혹은 충돌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박규택, 「사이공간으로서 로컬리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3),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2쪽 참조)

다는 사실은, 이들 행위주체들이 이 경계공간에 대해 적지 않은 욕망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 달리 말해 이 경계공간은 각종 공간 층위의 욕망들이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대상이 된다. 이로 볼 때, 하동은 내부의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의지·욕망들뿐만 아니라 외부(각종 공간 층위)의 각종 욕망들이 개입하는 현장인 셈이다.

이 글은 현재 경남 하동군의 재지역화 양상을 살피고 커먼즈(communs) 논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커먼즈 논의의 약점 중 하나는 이 논의·운동이 비교적 좁은 공간에 한정된다는 것이었다. 이 글을 통해 주로 소규모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커먼즈 논의의 폭을 좀 더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유일성과 경계공간에 대한 배타적 독점·선점

경계공간에 대한 하동의 태도는 내부의 기획과 실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재 하동은 표면상 대조적으로 보이는 두 성격의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듯하다. 지리적으로 보자면 하동은 남북으로 긴 형태를 띠고 있는데, 남쪽인 남해안에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를 조성했으며, 북쪽인 지리산 인근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하동세계차엑스포의 핵심인 야생차밭과 악양면의 슬로시티 등이 있다. 그리고 남해 가까운 곳에 “아시아에서 가장 긴 짚라인”⁸⁾을 자랑하는 금오산 짚라인이 있으며 금오산 케이블카가 설치 중에 있다. 골프장·호텔 등으로 구성된 두우레저단지

8) 「『생생정보』 이피디, 경남 하동 짚라인 도전 “아시아 최장 한번 타줘야”, 『데일리한국』, 2019.10.24., <http://daily.hankooki.com/lpage/entv/201910/dh20191024200314139030.htm> (검색일: 2021.07.05.)

가 섬진강 하구에 조성될 계획이다. 이러한 사정은 하동군 개발구상에서 이미 나타나 있는데, 남북으로 긴 하동군의 지리적 특성을 갈려 남·북으로의 4개의 개발회랑, 즉 남해안연안 일대의 산업회랑, 산업단지 배후의 거점도시회랑, 관광레저회랑 및 지리산 일대의 생태환경회랑을 구축하여, 각각 기업도시, 거점도시, 그린투어리즘 농촌마을, 아름다운 마을숲 및 그린 네트워크·문화관광레저 벨트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⁹⁾ 하동은, “광양만경제자유지역 하동지구의 활성화”와 함께 “지리산과 섬진강으로 대표되는 청정지역인 하동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 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과 보전”¹⁰⁾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상과 실천은 지역이라는 공간을 그 자체로 완결되고 독립적인 유기체로 간주하는 혹은 생성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하동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대부분의 지역들은 통상적으로, 생태·환경과 근대화·산업화를 중요한 두 축으로 상정한 후 정보·교육·레저 등의 4·5차 산업을 추가하여 완벽한 전일체적 존재로 구축하려 기획한다. 이때 기존에 구비하고 있던 성격은 강화해야 할 대상으로, 결핍된 부분은 보강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 가령, 한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기획되고 탄생한 울산과 포항은 최근 들어 결핍부분인 문화와 역사, 생태, 관광 등을 강조하는 경향을 띤다. 울산은 고래·반구대 암각화 등을 역사문화자산으로 발굴하여 각종 축제와 표상체 등을 통해 지역문화의 면모를 강화해갔으며 태화강을 한국의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에코도시의 면모를 구비해갔다. 포항 역시 보행자 중심의 녹색생태도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기치로 포항 GreenWay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동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는 문화·관광·레저 도시를 꿈꾸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9) 민말순, 「21세기 창조와 네트워크 사회를 향한 하동군의 개발구상」, 『경남발전』 74, 경남발전연구원, 2005, 62~76쪽 참조.

10) 같은 논문, 77쪽.

산업단지 조성을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한다.¹¹⁾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 각 도시·지역들의 결핍 보완 노력은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인식에 기초한다. 즉 개별 지역·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결핍 부분을 드러내고 부각한다는 점, 이 결핍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각각의 개별 지역·도시들은 자신을 자족적이고 완성된 공간으로 구성하려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 결과, 각 도시·지역의 만족도는 자체적 완결성·자족성의 양적 팽창에 따라 즉 기존 정체성의 강화 정도와 결핍부분의 보완 정도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각 도시·지역들은 자족적이고 완결적인 공간이라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완결성·자족성의 정도라는 동일한 기준에 입각한 위계적 질서 속으로 편입해 들어가게 된다.¹²⁾

문제는, 이런 인식이 결국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 사이의 경계선을 단절·분절의 공간으로 이해하게끔 유도한다는 데 있다. 유기체·신체의 생존원리처럼 국가의 각 구성 공간들은 기능적·체계적으로 연결·통합되어 전체를 구성함으로써 발전해간다는 국가유기체론은 전체 기획에 의해 할당된 특정 역할과 성격을 각 도시·지역에 부여하고 요구했다.¹³⁾ 국가유기체론이 절대적 지위에 있었던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도시·지역들은 각자 부여받은 역할·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라는 상위 공간 층위를 완성하는 데 봉사해왔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라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세계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의 도시·지역들은

11) 「하동군민 '주거 만족도' 작년보다 높아졌다」, 『경남뉴스투데이』, 2021.07.02.

<http://www.kn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18>

(검색일: 2021.07.05.)

12) 주관적 행복지수와 객관적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삼아 서울과 하동을 직접 비교하면서, '재정' 항목에서는 동일한 만족수치를 보여주지만 '건강' 수치에서는 하동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는 결과(배웅규 외,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지수 개발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5), 한국도시설계학회, 2013, 59쪽 참조)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이유도, 이 두 지역이 자체의 완결성·자족성을 목표로 삼는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13) 조명기, 「지역문화 정체성의 재구성을 위한 공간인식 층위의 교호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71, 한민족문화학회, 2020, 410쪽 참조.

각자 생존의 주체·단위로 급격히 재편되었다. 국가 층위에서 규정되고 부여되었던 도시·지역의 역할과 성격은 신자유주의·세계화시대라는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도시·지역들은 기존의 지역성 위에 새로이 요구된 덕목들을 구비하고 결핍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신자유주의·세계화 시대에 맞서고자 했다.¹⁴⁾ 각 도시·지역들은 환경수도, 전통문화수도, 문학수도, 해양수도, 피란수도 등으로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도시·지역 자체를 독자적인 생존의 단위로 재편하기 위한 자기완결성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하동의 4개 개발회랑이 보여주듯 국가유기체론은 지역유기체론으로 하강되었다. 개별 도시·지역이 생존의 단위·주체로 전환되면서 각 도시·지역은 스스로를 공고한 정체성을 지닌 독자적 존재로 상상하기 시작했고 다른 도시·지역은 조립·체결의 대상에서 경쟁의 대상으로 재인식되었다. 거의 모든 도시·지역들은 정체성의 조건인 개별성과 자기 동일성을 학술적으로 탐문하고 그 결과를 축제 등의 방식으로 홍보·확장하여 승인 받으려는 노력했다.

개별성은 타자와의 차이에서 생성되고 자기 동일성은 변치 않은 원천에 대한 상상에서 확인된다. 차이에 대한 욕망이 타 지역과의 경쟁심과 결합할 때 더욱이 경쟁의 결과가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 개별성에 대한 욕망은 독점·선점의 양태로 굴절되기 십상이다. 지역의 개별성과 자기 동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적 원천이나 원류·원형에 대한 욕망이 경쟁적으로 전개된다. 하동의 경우 차시배지에 대한 논쟁이 그 예다. 2008년 하동군은 한국 최초의 차 시배지임을 공인하는 한국기록원의 인증서를 전달받으면서 공식적인 차 시배지(지방기념물 제61호)로 등록되었다.¹⁵⁾ 하지만 차 시배지에 관해서는 경남 김해시와 전남 구례군 등과 몇

14) 조명기, 「도시 정체성 재구성을 위한 전통 복원 양상과 곤경」,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266쪽 참조.

15) 「『천년녹차』, ‘최초 차 시배지’는 하동이다」, 『경남신문』, 2008.06.28.

년 동안 논란을 벌여야 했다.¹⁶⁾ 차를 심은 곳은 지리산 일대라고만 『삼국사기』 등에 명기되어 있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신문기사가 있을 정도였다.¹⁷⁾ 뿐만 아니라 화엄사의 장죽전을 차의 시배지로 보기 위해서는 문헌 자료의 추후 발굴이 요구된다는 학술적 의견이 제기되는가 하면,¹⁸⁾ 김해시는 여전히 자기 지역을 “국내 최초의 차 시배지(AD 48년)”¹⁹⁾라고 홍보하고 있는 등, 차 시배지와 관련된 논란은 완벽히 종결되지는 않은 듯 보인다. 여기에 경남 양산 통도사 또한 차 시배지 경쟁에 뛰어들었다.²⁰⁾ 차 시배지 논란은 ‘선점 · 독점 · 유일성에 대한 도시 · 지역들의 욕망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의 야생차는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라는 국가 층위의 인정 그리고 2017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라는 글로벌 층위의 인정²¹⁾을 통해 개별성 · 특수성과 역사성의 가치를 확보하게 되며,²²⁾ 24회에 걸친 하동야생차문화축제를 통해 순천 등 여타 지역의 야생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715469>(검색일: 2021.07.06.)

16) 박윤옥, 「지속가능한 농업유산과 박물관의 역할」, 『박물관학보』 34, 한국박물관학회, 2018, 59쪽 참조.

17) 「하동 VS 구례, 차 시배지 논란」, 『현대불교신문』, 2005.05.01.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94>
(검색일: 2021.07.06.)

18) 박동춘 · 이창숙, 「구례 지역과 화엄사의 차 문화에 관한 문헌 고찰」, 『정토학연구』 34, 한국정토학회, 2020, 112쪽 참조.

19) 김해 관광포털, <https://www.gimhae.go.kr/00510/00513/03740.web>
(검색일: 2021.07.06.)

20) “(통도사-인용자 주) 창건 당시부터 차 문화를 시작했다면 한국의 차 시배지의 역사도 재고돼야 한다”(이병인 · 이영경, 『통도사 사찰약수』, 조계종출판사, 2019)는 주장을 기반으로 양산시는 “천년고찰 통도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통도사가 녹차 시배지로 예부터 차문화가 성행했던 곳”이라고 설명한다. 양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yangsan.go.kr/tour/contents.do?mId=03080000000>(검색일: 2021.07.06.)

21) 하동 야생차에 대한 설명에서 내셔널과 글로벌 층위의 인정은 거의 빠지지 않는다. 박미경, 「하동세계차엑스포 구상과 개최전략 방안」, 『남도문화연구』 42,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21, 37~42쪽 참조.

22) 박윤옥, 앞의 논문, 55쪽 참조.

차나 보성다향대축제²³⁾ 등을 뒤로 밀어내고 야생차를 하동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상징하는 표상체로 만든 것으로 평가받는다.²⁴⁾ 특히 야생차문화축제는 여타의 지역축제가 그러하듯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역사문화의식 고취, 단결과 단합 및 공동체의식 함양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⁵⁾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몇 가지다. 1) 하동은 야생차 시배지라는 유일성을 배타적으로 독점한 후 이를 구심점으로 삼아 지역의 자기 동일성을 도모하려 한다는 점,²⁶⁾ 2) 자기 동일성 확인을 통해 성취되는 애향심·공동체의식은 타 도시·지역과의 경쟁을 통해 공고화된다는 점, 3) 지역의 개별성(혹은 정체성)의 가치는 내셔널과 글로벌의 승인을 통해 획득되고 독점적으로 보유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세계화가 도시·지역을 생존의 단위·주체로 재편함에 따라 하동을 포함한 한국의 도시·지역들은 생존을 위해 자기 정체성을 재편·강화한 후 재구성된 정체성을 내셔널과 글로벌 층위에서 인정받음으로써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는 셈이다. 상품화 가능한 유일성·개별성이 지역 정체성으로 선택·간주되며 내셔널·글로벌 등의 상위공간 층위로부터 인정받을 때 정체성의 가치는 획득된다.²⁷⁾

공간적 층위의 우회 혹은 스케일 점핑의 승인을 통해 개별성에 대한 인

23) 보성다향대축제는 보성을 “오랜 역사와 함께 최대의 차 생산지이며 차산업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을 가진 지역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1985년에 시작된 이 다향제는 “국내 최초로 개최”된 차문화축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차문화 축제”라고 강조한다.

https://www.boseong.go.kr/tour/festivity/tea_aroma(검색일: 2021.07.06.)

“최대”, “발상지”, “최초”, “명실상부”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보성 역시 (내셔널 층위에서) 선점·독점·유일성에 대한 인정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24) 임숙연, 「차문화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9, 13쪽 참조.

25) 같은 논문, 13쪽 참조.

26) 야생차와 시배지는 다소 모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결합을 통한 구심력은 균열을 내장하고 있기도 하다.

27) 이런 측면에서, 하동의 슬로건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과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하동’이란 설명은 내셔널 층위와 글로벌 층위로 우회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발상, 신자유주의·세계화를 주체화한 지역의 상황을 보여준다.

정이 우월성에 대한 인정으로 변모할 때, 경계공간 역시 인접지역과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선점·독점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며 경계공간에 대한 우월적 지배권 또한 상위공간으로부터 승인·인정받으려 한다. 특히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 국가하천의 경우, 이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된다.

지리산에서도 스위스 융프라우를 본뜬 ‘친환경 산악 전기열차’가 운행될 전망이다. 국내 산악열차 사업의 원조는 전북 남원시다. 남원시는 케이블카가 환경 훼손을 이유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산악열차 도입을 추진했다. 남원시가 처음 들고 나온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은 9년 만인 올해 시범사업이 가시화 단계에 이르렀다.²⁸⁾

구례군은 다음 달 산동면 자사리 온천지구부터 지리산 성삼재 하단부까지 3.1km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할 계획이다.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시도는 30여 년 전인 199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구례군은 “환경부가 제시한 ‘지리산권 시·군들의 합의를 통한 1개 노선 결정’은 회피일 뿐이다”며 “B/C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낙후된 전남권과 구례군에 먼저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⁹⁾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2년 산청·함양군이 환경부에 신청했지만, (중략)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도는 함양과 산청을 잇는 지리산 산지관광 특구를 개발하고 함양 백무동~산청 중산리 구간 케이블카 설치와 산악관광 리조트 건립 등 계획을 추진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중략)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재추진 의사를

28) 「남원 관광산업 활성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속도 낸다」, 『서울신문』, 2021.04.0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9014003> (검색일: 2021.07.07.)

29) 「케이블카 추진도 불가능, 포기는 더더욱 불가」, 『무등일보』, 2021.05.24. <http://www.mdilbo.com/detail/B1DoFP/645044>(검색일: 2021.07.07.)

밝혔고, 지난 5월 31일 경남도는 환경부에 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했습니다.³⁰⁾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형제봉 정상에 호텔과 미술관, 산악열차 정류장을 짓고 화개에는 3.6km의 케이블카, 악양에는 2.2km 모노레일을 건설하고, 정상에서는 삼성궁을 향해 12km 길이로 산악궤도 열차가 다니도록 하겠다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다.³¹⁾

상생기구는 하동군의 사업계획안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나온 △호텔 등 위락시설 제외 △케이블카 사업 축소 △대규모 관광개발 방식 지양 △지속가능한 체류형 산림관광모델 도입 필요 등을 부분적으로 제시했다.³²⁾

경남 하동군의 100년 미래 먹거리 핵심사업인 알프스하동 프로젝트가 계속 추진된다. 24일 하동군에 따르면, 하동군은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키로 했다. (중략) 알프스하동 프로젝트는 공공 150억원·민자 1500억원 등 1650억원의 사업비로 화개·악양·청남면 일원에 무가선 열차 12km, 모노레일 2.2km, 케이블카 3.6km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민박 고급화·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한 고품격 숙박환경 조성, (중략)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도 병행된다.³³⁾

지리산을 분할하고 있는 지자체의 수만큼 지리산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
- 30) 「환경부 산청 지리산 케이블카 또 제동」, 『KNN』, 2016.07.07.
<http://www.knn.co.kr/98435>(검색일: 2021.07.07.)
- 31) 「지리산 산악열차 환상에 고통받는 생명들」, 『경남도민일보』, 2021.06.15.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159>
(검색일: 2021.07.07.)
- 32) 「또 환경논리에 막혀... '하동 알프스'도 좌초」, 『한국경제』, 2020.12.1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1101951>
(검색일: 2021.07.07.)
- 33) 「하동군, 알프스하동 프로젝트 사업 계속 추진」, 『시스저널』, 2021.03.24.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07>
(검색일: 2021.07.07.)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다. 남원, 구례, 산청·함양, 하동 등 지리산을 에워싼 지자체들 모두 지리산 개발 계획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지리산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획득하려 한다. 각 지자체의 계획은 지자체 내부의 경제·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그 계획은 결과적으로 인접 지자체들의 지리산 개발 권리를 배척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환경부는 지리산권 시·군들의 합의를 통한 1개 노선 결정을 지침으로 내세우지만,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지리산이라는 경계공간을 독점(“1개 노선 결정”)·선점(“먼저 설치”)하기 위한 제로섬 게임³⁴⁾을 계속하고 있다. 마지막 인용문 등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배타적 경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개발권의 독점은 개발 효과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³⁵⁾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지향하는 것은 독자성·개별성·고유성이지만 이것들의 표상 방식은 획일적이다.

한편, 지리산권 지자체들의 개발 내용은 케이블카, 산악열차 등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 시배지 선정을 통해 독점·선점, 비닐하우스가 없는 유일한 마을³⁶⁾인 악양면의 슬로시티 선정이라는 유일성을 통해 획득하려 했던 지역의 개별성·특수성·역사성은 지리산 개발 독점·선점의 계획에서는 철저히 망각되었다. 개발 계획 내용이 획일적이다 보니 복수의 계획을 진행해야 할 필요는 없게 되며 1개 노선이라는 독점권을 승인하기 위한 각종 수치와 지자체간의 합의를 주문하게 된다.

34) “환경부, 2012년 ‘4곳 중 1곳 자율 조정’. 지리산 인근 지자체 모두 “양보 못해” 「지리산케이블카 추진도 불가능. 포기는 더더욱 불가」, 『무등일보』, 2021.05.24.
<http://www.mdilbo.com/detail/B1DoFP/645044>(검색일: 2021.07.07.)

35) 남원은 “지역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총 “6613억원의 편익이 발생”하여 비용편익비에서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남원 관광산업 활성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속도 낸다」, 『서울신문』, 2021.04.0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9014003> (검색일: 2021.07.07.)

36) 문선옥, 「국내 슬로시티의 경관 형성 특성에 관한 연구」, 『농촌건축』 13(3), 한국농촌건축학회, 2011, 17쪽.

3. 지리산과 섬진강:

커먼즈의 비극 혹은 친자본주의적 커먼즈

지리산을 에워싸고 있는 지자체들의 행위는 자발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합리적인 이익 추구 행위가 결국 사회적 공익과 충돌한다는 커먼즈(Commons)의 비극³⁷⁾을 연상시킨다.³⁸⁾ 지리산 개발 권리를 주장하는 지자체들은 각자 원자화된 개체일 뿐이다. 이들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다. 또한 지리산에 대한 권리는 인접 지자

37) 1968년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은 「커먼즈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그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목초지(커먼즈)에 방목하는 목축주들은 한 마리라도 더 많이 목초지에 방목하려 하는데, 추가적인 방목의 이익은 혼자서 누리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목초지의 파괴)는 모든 이용자가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모든 행위자가 이런 합리적 판단과 행동을 동일하게 취하기 때문에 목초지의 파괴는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정영신,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한국아시아학회, 2020, 240쪽 참조) “커먼즈는 인간사회의 주변에 존재하면서 인간 집단이 생계와 생존을 위해 의지하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자연자원과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인간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협력적인 제도들을 지칭한다.”(정영신,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로컬리티인문학』 1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123쪽) “커먼즈를 공유지나 공유재로 번역하는 것은 공동체적 소유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커먼즈는 이용자 공동체, 공동의 자원, 규칙 규범을 포함하는 제도들 사이의 복합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정영신, 앞의 논문, 2020, 244쪽 참조) 특히, 커먼즈는 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커먼즈는 추상적인 재화나 자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역사적, 문화적 차원을 지닌다. 여기에는 공동체와 공동자원,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축적되는 집단적인 기억과 문화, 인식과 실천의 차원이 포함된다.(정영신, 앞의 논문, 2017, 125쪽 참조) 커먼즈를 규정하는 것은 자원 자체의 내적 속성이라기보다는 그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한 인간의 실천이며 그 필요인 것이다.(장훈호, 『일을 되찾자: 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나뭇잎스, 2019, 32쪽 참조)

38) 이 글이 지리산과 섬진강을 커먼즈 담론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산과 강, 바다는 전통적인 커먼즈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곳(데이비드 볼리어, 박현주 역,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2015, 190쪽 참조)이라는 점, 하동군은 국가신탁 커먼즈가 3면을 에워싸고 있는 독특한 지역이기에 새로운 세계관과 제도를 구상하고 실천하기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 지역이라는 점, 후술하겠지만 소설 『토지』의 배경이자 슬로시티로 인정된 악양면을 품고 있기에 하동군은 커먼즈 운동의 잠재태를 이미 내장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체들을 배제하지 않지만 경합시킨다. 지리산권 지자체라면 누구나 지리산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리산 개발에 대한 특정 지자체의 권리 인정은 다른 지자체의 권리를 제한한다.³⁹⁾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지리산 개발 기획은 다른 지자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독점·선점의 형태 즉 배타적 사적⁴⁰⁾ 소유 형태로 전개되지만 다른 지자체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합리적 판단과 행동을 할 것이기에, 지리산이라는 커먼즈는 필연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리산이 무너지면 곧 우리나라의 산들이 모두 무너진다”⁴¹⁾는 환경단체의 성명은 지리산의 대표성·상징성을 지적한 것인 동시에 커먼즈의 훼손을 지적한 것이다.

하동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논리적 근거 중 하나는 하동에 속해 있는 형제봉이 지리산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⁴²⁾ 커먼즈 담론으로 보자면, 이 근거는 커먼즈를 국가 소유의 공공재(public goods)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커먼즈는 사적(私的) 소유뿐만 아니라 공적(公的) 소유와도 구별된다. 커먼즈는 정부나 국가에 해당하는 공(公), 시장에 해당하는 사(私)와는 별개의 섹터인 공(共)의 영역에 속한다.⁴³⁾ 사(私)와 공(公)이 자본주의 체제 하의 절대적인 배타적인 소유권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사와 공의 바탕인 공(共)⁴⁴⁾은 여러 재산

39) 권범철,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1, 문화과학사, 2020.봄, 19쪽 참조.

40) 지자체는 그 내부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의견과 행위들이 공존하면서 상향식 공공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장이기도 하지만, 지리산에 대한 독점적 개발 권리를 주장하고 강행할 수 있는 하향식 의사결정·행위의 주체이기도 하다. 여기서 ‘사적’이라는 단어는 후자 즉 개인이 아니라 자신을 독립적 유기체·균질한 동일체로 상상하고 행위하는 개별 지자체를 가리킨다.

41)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추진, 당장 멈춰라!!!」, <http://kfem.or.kr/?p=208413>(검색일: 2021.07.08.)

42) 같은 사이트.

43) 이시자키 료코, 「‘모두의 것’으로서의 산림의 현재」, 이노우에 마코토 편, 최현 외 역, 『공동자원론의 도전』, 경인문화사, 2014, 335쪽 참조.

권(property rights)의 문제 즉 접근권, 수익권, 관리권, 배제권, 양도권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의 문제이다.⁴⁵⁾ 형제봉의 국립공원 미포함이라는 논거는 '권리의 다발'을 소유권의 문제로 축소함으로써, 그 재화에 대한 책임감을 주장하는 공통인들의 집합을 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⁶⁾ 즉, 지리산은 정부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국가신탁 커먼즈이지만 지리산권 지자체는 지리산을 전통적인 커먼즈로 간주한다.⁴⁷⁾ 하지만 지리산의 독점·선점을 경제적 이득의 독점·선점으로 치환하려는 지리산권 지자체들의 태도는 사적 소유 중심의 자본주의에 지배되고 있기에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체득한 영리 패러다임⁴⁸⁾과 연관된다.

한편, 광양·구례·곡성·하동 등 4개 지자체가 체결한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표면적으로는 지리산의 경우와는 달리 배타적 경쟁이 아니라 협력적 관계의 조성 사례를 보여준다.

44) 김광현, 「공(公)이 있기 전에 공(共)이 있다」, 『한국경제』, 2020.02.1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21694181>(검색일: 2021.07.08.)

45) Schlager and Ostrom, "Property-Rights Regimes and Natural Resources: A Conceptual Analysis", *Land Economics* 68(3), 1992, pp.249~262.; Elinor Ostrom and Cole Daniel eds, *Property in Land and Other Resource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12. 여기서는 정영신,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254쪽에서 재인용.

46) 권범철, 「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공간과 사회』 29(3), 한국공간환경학회, 2019, 19쪽 참조.

47) 데이비드 볼리어는 커먼즈의 종류를 ①산림, 목초지, 물 등의 전통적인 커먼즈, ②신성한 장소, 문화지식 등의 토착민 커먼즈, ③시간은행, 혈액, 지역 공동체의 정원, 마을축제, 공동거주 등의 사회 커먼즈, ④국립공원, 국유지 등의 국가신탁 커먼즈, ⑤탄소배출, 생물다양성 등 전지구적인 규모의 관리가 필요한 글로벌 커먼즈로 구분한다. 데이비드 볼리어, 배수현 역,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2015, 189~214쪽 참조.

48) 영리 패러다임은, 장벽과 배제를 통한 자원의 희소성·독점을 중시하며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고갈/수탈 인클로저의 양태를 보인다. 류석진 외, 「지역재생산관점의 로컬 커먼즈 구현 가능성 연구」, 『현대정치연구』 13(2),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20, 68~69쪽 참조.

섬진강권 기초자치단체인 광양시와 구례·곡성·하동군은 이날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연계, 5G 공공와이파이망 등을 구축해 4개 지자체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섬진강권 스마트 관광 시스템'(가칭 섬진강 통합패스)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표 봄꽃축제인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곡성 장미축제, 하동 벚꽃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섬진강권을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지난해부터 하동군과 함께 섬진강 중심의 공유관광 콘텐츠 개발, 섬진강 따라 한 바퀴 등 '경·전 문화 공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⁴⁹⁾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섬진강권의 지자체들은, 지리산권 지자체들이 지리산을 분할과 독점·선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듯 보인다. 일종의 고정체로 존재하는 폐쇄적인 산과는 달리 강이라는 자연물은 '흐름'이라는 개방성을 띄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이 때문인지 섬진강권 지자체들은 섬진강을 중심으로 "통합"·공존하려는 태도를 취한다.⁵⁰⁾ 이는 각 성원의 개별 이용을 인정하는 한편 개별이용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공통이익

49) 「전라·경상 아우른 섬진강 관광벨트 조성」, 『광주일보』, 2021.02.04.

<http://kwangju.co.kr/article.php?aid=1612448100714124137>(검색일: 2021.07.08.)

50) 이 글은 강의 특성인 '흐름'이 산의 고정성보다 더욱 개방성을 지닌다고 판단한다. 그렇다고 '흐름' 때문에 섬진강권 지자체들이 필연적으로 통합·공존의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흐름' 혹은 '흐름'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개방성'을 재인식하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흐름이 아니라 '개방성'에 대한 재인식 즉 미정제된 형태의 커먼즈 의식이 섬진강권 지자체들로 하여금 섬진강을 이익이나 피해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공동자원으로 인식하도록 주문했다. 이는 지리산의 성격을 폐쇄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개방성으로 재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지리산을 지리산권 지자체를 관통하는 흐름의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리산의 '개방성'을 발견하는 한 방식일 수 있다. 섬진강이나 지리산의 정체성은 각각의 공간에 이미 각인되어 있는 교유의 성격과 인식 주체의 개입·시선이 교차하면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을 보존·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표 등의 불법/부당 처분이라는 일탈행위에 대항하는 준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일종의 공동체적 소유⁵¹⁾를 가리키는 총유(總有)적 성격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⁵²⁾

지리산을 둘러싼 지자체들의 배타적 경쟁에 비추어 볼 때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 계획은 ‘공동의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되는 자원’⁵³⁾에 대해 상대적으로 분명한 인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계획이 지리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섬진강을 커먼즈의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한계로 인해 친자본주의적 커먼즈⁵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첫째, 이 계획은 단지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 즉 공동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 활동이자 그 산물로서 기존의 삶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과 방식을 부단히 추구하는 ‘되기’의 실천적 과정을 지향하지 않고⁵⁵⁾ 사적소유제도와 개발주의 정책

51) 정영신, 앞의 논문, 2020, 243쪽 참조.

52) 박태현·이병천, 「자연자원의 집합적[또는 공동체적] 관리와 총유제(總有制)」, 『환경사회학연구 ECO』 21(1), 한국환경사회학회, 2017, 7~8쪽 참조. 현대총유론은 인구감소,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의 소멸 위기, 저성장이라는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2000년대 등장한 사회개혁론이다. 국가와 개인이라는 이항 사이에 중간조직으로서의 커먼즈를 삽입함으로써 국토자원과 제도 등을 거시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윤여일, 「축소형 사회의 도래와 현대총유론」, 『환경사회학연구 ECO』 22(1),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103쪽 참조. 총유는 커먼즈의 번역어 중 하나로 주로 법학 분야에서 사용된다.

53) 정영신, 앞의 논문, 2020, 251쪽 참조.

54) 카펜치스는 커먼즈 담론이 “필연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이라는 그릇된 가정 때문에 그 개념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커먼즈를 두 가지로 대별한다. 하나는 자본주의적 축적과 양립가능하며 그것에 힘을 더하는 친자본주의적 커먼즈 즉 신자유주의의 전략적 도구로서의 커먼즈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적 축적에 적대적이고 전복적인 반자본주의적 커먼즈다. Caffentzis, “The Future of ‘The Commons’: Neoliberalism’s ‘Plan B’ or the Original Disaccumulation of Capital?”, *New Formations* 69, Summer 2010, pp. 23~41. 여기서는 권범철, 「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공간과 사회』 69, 한국공간환경학회, 2019, 23쪽에서 재인용.

55) 안새롬·윤순진, 「도시 커먼즈 운동의 의미」,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공간환경학회, 2018, 136~138쪽 참조.

이 만들어내는 폐쇄성·배타성을 강조하는 ‘근대화된 커먼즈’에 머문다는 점이다.⁵⁶⁾ 둘째, 각 지자체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연계”는 관광객의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각종 요소들을 통합함으로써 관광자원의 규모화를 통해 섬진강을 자본주의적 시장의 매력적인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이때 섬진강은 커먼즈라기 보다는 공통재화(common goods)로 간주될 뿐이다. 커먼즈는 공통의 재화와 그것을 둘러싼 집합적 주체 그리고 공통 재화를 함께 생산하고 유지하는 활동이 어우러진 사회 체계다. 커먼즈는 단순히 재화로 축소될 수 없으며 공통재화는 커먼즈를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이다.⁵⁷⁾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섬진강권 지자체들의 인식 내용이 사뭇 동질적이었던 데 있다. 즉 이들 지자체는 이동성이라는 강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섬진강을 다수가 이용하고 영향받는 공통재화로 인식하게 되었지만, 이 공통재화에서 출발한 협력은 더 많은 자본의 축적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협력의 목적은 자본주의적 시장이 가진 힘을 환수하여 지역 공동체로 다시 귀속시키는 데 있지 않았다. 그래서 섬진강권 지자체들은 ‘우리 모두’의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진 복수의 커머너(commoner), 집합적 주체가 될 수 없는 셈이다.

4. 커먼즈의 이중성과 가능성

모든 유형의 자원이 상품화되어 사적 재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유형의 자원은 그 자원과 인간의 관계에 따라 공동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⁵⁸⁾ 친자본주의적 커먼즈의 성격이 농후하기는 하지만, 섬진강권 지자

56) 정영신, 앞의 논문, 2020, 252~253쪽 참조.

57) 권범철, 앞의 글, 2020.봄호, 22쪽 참조.

체들이 섬진강을 공동자원으로 재인식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 하나는 남원, 순창, 임실, 곡성, 구례, 하동 등 섬진강 중·하류 지역에 극심한 피해를 입힌 2020년 홍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 인접 11개 지자체와 6개 특별기관으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13일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에는 남원·순창·임실·곡성·구례·하동 등 피해 지역 시장·군수가 모두 동행한다. 협의회는 이날 방문에서 수공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댐 관리 등 '물 일원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 마련도 요청할 계획이다. (중략) "관리단은 홍수 예방보다 물이용에 초점을 맞춘 댐 관리를 했고 이것이 이번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⁵⁹⁾

홍수 피해를 입은 섬진강 하류지역 주민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섬진강 권역 7개 시군 주민들이 방류피해에 대한 보상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전남 구례, 곡성, 광양, 전북 남원, 순창, 임실, 경남 하동 등 섬진강권역 7개 시군 주민 40여명은 13일 구례군의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략)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의 경우 주민들이 단합해서 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섬진강권역 주민들도 뚝뚝 뭉쳐 민형사상 대응을 하자"고 호소했다.⁶⁰⁾

4개 시군(구례, 곡성, 광양, 하동-인용자 주)은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이겨내고, 각 도시를 연계하고 상생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중략) "지난해 8월 유례없는 홍수피해를 본 구례군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해 예방, 민간배상과 더불어 생활SOC와 관광인프라가 병행해서 구축돼야 한다"며 "(중

58) 장훈교, 앞의 책, 29쪽 참조.

59) 「섬진강 홍수... "수자원공사의 물욕심이 부른 참사"」, 『뉴스1』, 2020.08.11., <https://www.news1.kr/articles/?4023185>(검색일: 2021.07.09.)

60) 「섬진강 하류 주민들, 방류피해 공동대응 나서」, 『남도일보』, 2020.08.13.,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071>(검색일: 2021.07.09.)

략) 구례군 발전뿐만 아니라 수해를 입은 인근 지자체를 비롯해 영호남
이 상생하는 방향에서 수립한 것”⁶¹⁾

2021년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년 전인
2020년, 섬진강권 지자체들은 모두 섬진강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원인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에도 불구하고,⁶²⁾ 이 공통된 경험은 섬진
강권 지자체들이 섬진강을 공동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자체
의 지방정부들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물이용에 초점을 맞춘” 중앙정
부에 항의했으며 각 지자체의 주민들은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을 “호소”
했다. 나아가 이들 지자체는 피해 회복에 머물지 않고 “수해를 입은 인근
지자체”가 “연계”하여 “영호남이 상생하는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기획”한다. 물론 그 결과 체결된 섬진강권 통
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물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
에서 즉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들의 비판이 비판의 주체에게 회귀되는 자
기풍자의 결과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다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주변으로
서의 지역·종속된 위치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⁶³⁾ 또한 확인
할 수 있다. 공동자원에 대한 재인식, 공통감각의 회복, 분권화와 협업에
기반한 (공통의 부를 사용하고 돌보기 위한) 합의 추구 등을 볼 때, 홍수 피
해라는 지극히 불행한 공동의 사건은 섬진강권 지자체들을 일종의 공동체
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⁶⁴⁾ 홍수 피해와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61) 「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시급하다」 국비 확보 나선 구례군, 『NEWSIS』, 2021.04.15.,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5_0001407525&cID=10899&pID=10800
(검색일: 2021.07.09.)

62)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 화개장터 홍수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두고 여야
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영·호남 화합 상징 화개장터, 물난리 원인 놓고 여야 갈라
섰다」, 『중앙일보』, 2020.08.10., <https://news.joins.com/article/23845076>
(검색일: 2021.07.10.)

63) 정남영, 「커먼즈 패러다임과 로컬리티의 문제」, 『로컬리티인문학』 14, 부산대 한국민족
문화연구소, 2015, 111쪽 참조.

호소, 이후의 대응 과정은, 물이용을 통한 자본 증식 추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섬진강권 지자체들이 주인의식을 지닌 커머너(commoner)로서 자신을 재인식, 재특이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섬진강권 지자체들은 홍수라는 공동의 피해를 통해 역설적이게도 섬진강에 대한 공통감각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지리산을 공동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앞서 보았듯 지리산은 배타적 경쟁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동군은, 섬진강과 관련된 인식·실천의 변화를 지리산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내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섬진강 홍수 피해 이후인 2020년 10월 22일 '섬진강미래회의준비위원회'는 “자연의 용서와 강의 응답을 위하여” “섬진강 따라 걷기”를 기획한다.

범람의 슬픈 기억을 새기며 섬진강을 따라 걷는다. 지난 여름 잡겨버린 논밭과 축생들의 죽음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절망을 떨치기 위해 530리 길의 섬진강을 모두 걷기로 한다. 우리의 아픔만큼 강의 아픔도 컸을 것이다. 강과 우리의 이 아픔은 무엇인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지 깊은 성찰을 위해 강을 따라 걷는다. (중략)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우리는 그동안 자본의 풍요 속에서 모두가 소비의 과잉 속에 살았다. 그 배후에는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함께 성장한 자본주의가 있었고 이제 21세기에 들어 우리는 그동안 쉽 없이 침탈당한 자연에게 그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이다. (중략) 인간의 탐욕과 오만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의 구체적 생활세계의 일상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다. (중략) 섬진강 따라 걷기는 인간의 이기적인 인위적 질서에서 자연의 순환질서로 가기 위한 걷기가 될 것이다.⁶⁵⁾

64) 커먼즈는 공통의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 수립에 기초하기에 공동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실비아 페데리치·조지 카펜치스·권범철, 『자본주의에 맞선 그리고 넘어선 커먼즈』, 『문화과학』 101, 문화과학사, 2020, 186쪽 참조.)

65) 「수해로 상처난 섬진강을 걸으며 용서와 치유를」, 『광주in』, 2020.10.23.,

커먼즈 담론·운동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 불가한 관계로 인식함으로써 인간중심주의의 현재적 발상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동식물의 역량까지 고려한다면,⁶⁶⁾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로써 “강의 아픔”을 이해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인위적 질서”를 “자연의 순환질서”로 전환하려는 기획과 실천은 지극히 커먼즈적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의 지방정부는 자본주의적 이익을 공유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자원을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친자본주의적 커먼즈를 모색한다면, 섬진강권 지자체의 시민단체는 자본의 축적을 넘어서는 탈자본주의적 커먼즈⁶⁷⁾를 제시한다. 섬진강 홍수 피해 보상을 위한 지자체 주민들의 연대가 경제적 피해 보상을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 것에 반해, 섬진강 따라 걷기는 공유된 물질적 부가 아니라 공유 자체와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대의 끈을 강조하는 지극히 비자본주의적이고 비효율적 실천인 ‘공통하기’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외부, 자본을 넘어서는 대안을 지향한다.⁶⁸⁾

더구나 많은 시와 수필 등의 문학과 대중가요 〈화개장터〉 등은 섬진강을 경계 양편을 연결하고 양편이 공유했던 공동자원으로 기억한다. “빈 집도 많아졌고 이웃 간의 정도 예전 같지 않”⁶⁹⁾은 현재를 목도할수록 기억 속의 커뮤니티는 더욱 소중한 것으로 회고된다. 이 기억들이 축적되고 지배적이 되면서 일종의 집단기억이 형성될 터인데, 커머닝(commoning)의 대부분은 기억에 의존한다⁷⁰⁾는 점을 감안하면 섬진강을 공유자원으로 인식했던

<https://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27>

(검색일: 2021.07.10.)

66) 한상진, 「생태사회적 커먼즈를 향한 성찰과 관련 사례들」, 『환경사회학연구 ECO』 22(2),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77쪽 참조.

67) 권범철, 앞의 논문, 2020. 봄, 32쪽 참조.

68) 실비아 페데리치·조지 카펜치스·권범철, 앞의 글, 186쪽 참조.

69) 이승하, 「이 땅의 시인들은 경남 하동을 어떻게 노래했는가?」, 『하동문단』 16, (사)한국문인협회 하동지부, 2020, 36쪽 참조.

70) 줄리 리스타우, 「공유자가 되려면」, 제이 월레스퍼 역음, 박현주 옮김,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검둥소, 2013, 372~373쪽 참조.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반복된다는 것은 커머닝이라는 실천이 섬진강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섬진강권 지자체에 속하는 하동군은 신뢰와 연대를 위한 커먼즈 운동이 이미 진행되고 시험되고 있는 장(場)인 셈이다.

한편, 슬로시티는 속도사회와는 차원이 다른 장소의 사회적 구성을 구현하고자 한다. 삶의 속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지향하며 인간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는다.⁷¹⁾ 슬로시티 운동의 기원은 슬로푸드 운동인데, 슬로푸드 운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먼즈 운동의 일환이다.⁷²⁾ 2009년 야생차, 대봉감을 슬로푸드로 삼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며 국제슬로시티로 인정받은 하동 약양면은 인간과 자연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로 변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⁷³⁾ 야생차문화축제에서도 최참판댁·평사리·동정호 등 약양면 일원을 ‘슬로라이프존’(14회) 혹은 ‘녹색느림마당’(17회 이후)으로 명명하면서 슬로시티의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물론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하동~화개 국도 19호선 건설공사를 2021년 6월에 마무리하면서 관광객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⁷⁴⁾이 속도에 대한 강박을 드러내는 것처럼, 슬로시티에 대한 하동의 인식 역시 독특성·고유성을 경쟁력으로 치환한 장소성·지역축제 등을 통해 자본 축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대적이며 자본 중심적이다.⁷⁵⁾ 이런 모순적인 양상은 하동의 청학동에서도 발견된

71) 손대현·장희정, 『슬로시티에 취하다』, 조선앤북, 2010, 162~164쪽 참조.; 백두주,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4), 한국지역개발학회, 2008, 118쪽 참조.

72) 정남영, 앞의 논문, 112~113쪽 참조.

73) 신희석, 「슬로시티 심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주민의 환경인식」,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0, 49쪽 참조.

74) 「섬진강변 19번 국도 확장 개통... 화개장터로 이어진다」, 『토목신문』, 2021.05.31., <http://www.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2>(검색일: 2021.07.10.)

다. 청학동은 전통시대 이상향의 원형이었는데 이후 공간적 변이와 장소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현재는 매스미디어에 알려진 후 지자체의 관광정책에 의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마케팅장소로 변모해⁷⁶⁾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청학동의 역사적 장소성은 초월적 이상향의 공간, 지식인의 현실적 자의식이 각인되는 공간이었지만,⁷⁷⁾ 현재의 청학동은 무대화된 진정성을 상품화하는 관광지로 소환되고 있다.

관광지로서 청학동의 매력이 역사적 진정성에서 비롯되었다면, 소설 『토지』의 배경공간으로 등장하고 드라마의 세트장으로 시작된 최참판댁의 매력은 사후에 구성된 것이다. 최참판댁은 소설 『토지』에서 장소성의 자양분을 흡수하기에 소설이 지리산과 악양면 평사리를 재현하는 방식에 지배받는 공간이다. 『토지』가 악양면 평사리와 지리산에 부여한 성격은 사뭇 다르다. 소설의 공간은 평사리, 진주, 부산, 경성, 장춘, 하얼빈, 러시아 등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소설은 평사리에서 시작되어 평사리에서 끝나며 수백 명의 등장인물이 관계를 확장해가는 서사의 시원도 평사리다.⁷⁸⁾ 소설은 마을사람들의 생업공간인 평사리를 상반된 두 모습으로 재현한다. 하나는 주로 구체적인 묘사장면에서 드러나는데, 여기서 평사리는 빈곤·불평등·지주와 소작의 관계 등은 미약한 대신 농촌의 건강한 삶, 노동의 신성함, 걸쭉한 농담과 은밀한 유혹이 강조되는 평등한 공유공간이다.⁷⁹⁾ 반면에 소설

75) 이 글은 커먼즈를 반자본주의적인 저항의 언어로만 이해하지는 않으며 국가와 시장의 대안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기능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파괴하기 보다 중화와 흡수를 통해 커먼즈를 관리하고 조정하려는 자본을 넘어서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연대를 통한 집합적 주체의 형성 가능성에 더욱 주목한다. (정영신, 앞의 논문, 2020, 242쪽 참조; 권범철, 앞의 논문, 2019, 15쪽, 26쪽 참조)

76) 최원석,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청학동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4(6), 대한지리학회, 2009, 745쪽, 757쪽 참조.

77) 강정화, 「조선조 문인의 지리산 청학동 유람과 공간 인식」, 『장서각』 3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125쪽 참조.

78) 이상진, 「『토지』의 평사리 지역 형상화와 서사적 의미」, 『배달말』 37, 배달말학회, 2005, 263쪽.

의 전체 서사는 평사리의 소유를 둘러싼 쟁탈로 시작하고 마무리된다. 평사리의 소유권을 상실하면서 서희는 간도로 추방당하고 평사리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면서 평사리로 귀환한다. 서희가 평사리에 대한 소유 권리를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는 곧바로 평사리에서 기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서희와 경쟁상대 조준구에게 있어 평사리는 독점·획득이라는 욕망의 대상이지 공유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조준구가 완전히 서희의 전유공간이었던 평사리를 강탈했을 때 평사리는 그녀에게 외상 사건이 일어난 공간이 된다. 그래서 이후 평사리에 대한 권리의 회복과 귀환은 희망의 실현이 되며 회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그녀의 미래가 된다.⁸⁰⁾ 평사리에 대한 권리 보유 여부는 경쟁에서의 승패와 연동되며 그 승패의 결과는 독점 혹은 추방이다. 평사리의 이런 독점 자본재적 성격을 강화하는 인물은 봉순이다. 그녀에게 있어 평사리는 전유 공간이 아니었기에 평사리를 통해 실현할 희망을 갖지 못한다.⁸¹⁾ 평사리는 전유·보유 유무로 인물의 귀속성을 결정하는 공간이며, 전유·보유 여부는 배타적인 방식으로 결정되며, 전유·보유의 성공이나 실패는 인물의 생애 전체를 결정짓는다. 평사리는 풍요와 죽음이라는 모순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반면, 평사리가 인간의 잉여적 욕망 충족을 위한 갈등이 야기되는 공간이라면 지리산은 소설 『토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공간이다.⁸²⁾ 마을 뒷마당과 연결된 지리산은 동학 무리의 연락처, 은신처, 모색공간으로서 소설의 후반부에는 민족독립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다.⁸³⁾ 또한 최참판댁이

79) 같은 논문, 274~275쪽 참조.

80) 전예진, 「『토지』의 여성이 겪는 트라우마와 공간 이동」, 『현대문학이론연구』 7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427쪽 참조.

81) 같은 논문, 427쪽 참조.

82) 정호웅, 「〈토지〉론-지리산의 사상」, 정현기 편, 『한과 삶-〈토지〉 비평1』, 숲, 1994, 278쪽 참조. 이승윤은 『토지』의 배경이 하동 평사리였던 이유는 지리산 때문이라면서 작가에게 있어 지리산은 한과 저항의 공간이라고 설명한다.(이승윤, 『10개의 공간을 따라 읽는 소설 토지』, 엘피, 2021, 39쪽 참조)

폐쇄적이고 남녀의 교류를 허락하지 않는 공간이라면,⁸⁴⁾ 지리산은 김개주가 윤씨부인을 겁탈하고 구천이와 별당아씨가 야반도주하는 자유와 사랑을 위한 도피의 공간, 김개주·김환·김길상이라는 남성 3대의 저항과 자유 의지가 자비·생명·화해·모성에 대한 각성으로 승화되는 공간이다.⁸⁵⁾ 이병주의 『지리산』,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이 좌/우, 남/북의 대립·갈등을 지리산으로 수렴하여 응축하고 있다면, 해방을 서사의 끝으로 삼은 『토지』는 영호남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상이 화합하고 공존하는 역사의 광장⁸⁶⁾이라는 지리산의 축적된 역사적·문화적 공간성에 더욱 주목한다.

『토지』의 서사는 서희라는 인물과 평사리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서희 그리고 평사리는 봉순과 김길상 등의 남성들 그리고 지리산이라는 공간을 통해 치유된다. 이러한 인물과 공간의 대조에서 커먼즈의 중층적인 면모, 가치지향과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커먼즈는 연대·공유·협력의 가치가 실현되는 장인 동시에 갈등과 투쟁이 전개되는 무대다.⁸⁷⁾ 왜냐하면 커먼즈는 그 자체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성격을 부여받기 때문이다.⁸⁸⁾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개인화되고 자본 중심적인 관점으로 공통재화를 인지하고 평가하기를 요구하는 데 반해, 반자본주의적 커먼즈는 자본주의적 축적에 전복적인 태도를 취한다. 커먼즈 담론·운동은 전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지배하는 현재 즉 동질

83) 이상진, 앞의 논문, 263쪽 참조.

84) 같은 논문, 271쪽 참조.

85) 이승윤, 「소설 『토지』에 나타난 모빌리티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72,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368~369쪽 참조; 이상진, 「자유와 생명의 공간, 〈토지〉의 지리산」, 『현대소설연구』 3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296쪽 참조.

86) 국민대 국사학과, 『우리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지리산문화권』, 역사공간, 2004, 20~43쪽 참조.

87) 권범철, 앞의 논문, 2019, 15쪽 참조.

88) 권범철, 앞의 논문, 2020.봄호, 21쪽 참조.

성·등가성으로 인해 개체가 알 수 있는 존재로 수동화·계열화되는 현재의 부정적 양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현재 인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계열의 바깥으로 뛰쳐나와 등가에 기반을 두지 않고 차이에 기반을 둔 평등의 실천을 의미하는 ‘재특이화’(resingularization)를 강조한다.⁸⁹⁾

소설 『토지』는 평사리와 지리산이라는 대조적 성격의 두 공간을 병치함으로써 자본 중심의 독점적 지배질서와 이 계열의 바깥인 유토피아적 질서가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형상화한다. 소설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지리산의 가치를 지향하게 되는데, 지리산의 가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원한 역사적 매개체는 동학이다. 커먼즈 담론에서 볼 때 공동체 원리와 조직체계 등에서 확인되는 동학의 공공성은, 커먼즈 담론·운동의 지향점 즉 공통감각과 상호연결성의 발전을 통해 사회적 유대와 신뢰를 창조하려는 목표를 연상시킨다.⁹⁰⁾ 평사리와 대조되면서도 평사리와 동학을 품고 있는 소설 『토지』의 지리산은 새로운 커먼즈에 대한 구상을 유토피아라는 형태로 이미 잉태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하동은 소설 『토지』와 관련하여 커머너로서 실천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박경리(박경리문학관)라는 문화적 유산을 두고 원주, 통영 등과 장소영역주의에 입각한 이해 갈등을 전개하다가 문화적 교류와 협력의 커머너로 전환한 실천을 행하고 있다. 박경리라는 공동자원을 두고 하동과 원주와 통영은 스스로를 각각 소설공간, 활동공간, 출생지로 부각하면서⁹¹⁾ 배제를 통한 ‘구별짓기’를 시도했지만,⁹²⁾ 지금은 공동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89) 김치완, 「로컬리티와 커먼즈 담론 공간에서 본 동학(東學)」, 『대동철학』 81, 대동철학회, 2017, 303~304쪽 참조; 정남영, 앞의 논문, 105쪽 참조.

90) 김치완, 앞의 논문, 300~303쪽 참조; 이원재, 「‘문화 커먼즈’와 공유성복원탁회의의 실험」, 『문화과학』 101, 문화과학사, 2020, 153~154쪽 참조.

91) 문인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유형에는 출생지 활용형, 거주지 활용형, 작품 활용형이 있는데, 통영, 원주, 하동이 각각에 해당한다.(정명숙, 「문인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유형 연구」,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2013, 6~8쪽 참조)

92)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개별성을 형성하는 공동-개별화의 과정⁹³⁾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들이 공동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기 위한 커먼즈를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나오며

신자유주의·세계화 시대를 맞아 생존의 단위로 재편된 한국의 지역들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유출,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들은 자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란 산업단지 유치, 관광객 유입, 마을재생과 독점·선점적인 장소성의 강화 등 획일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경남 하동 역시 마찬가지다.

커먼즈 담론·운동은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한 반성·성찰의 지점에서 대안적 담론·실천으로 제시되었다. 이 글은 커먼즈 담론·실천이라는 대안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경남 하동을 통해 타진하려 했다.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남해라는 국가가 관리하는 자연물을 3면의 경계선으로 삼고 있다. 이 경계공간들은 인근 여러 지자체들과 하동은 구분하고 연결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경계공간의 인근 지자체들은 경계공간에 대한 공유가 아니라 권리의 독점·선점을 통해 지역의 고유성·유일성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지리산 개발 권리의 유일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이로 인한 이익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의지를 공통되게 드러냈다. 경계공간·사이공간인 지리산은 커먼즈의 비극의 현장이 되어 있다.

반면, 섬진강이라는 경계공간에 대한 태도는 지리산의 그것과는 다소 달

2013, 50쪽 참조.

93)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287~288쪽 참조.

라 보인다. 섬진강권 지자체들은 2020년 홍수라는 공동의 재난을 경험하면서 지방정부와 시민단체·피해주민들의 연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공동의 피해라는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서 섬진강에 대한 배타적 경쟁이 아니라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여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기획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기획이 친자본주의적 커먼즈라는 점, 커먼즈라는 공통재화 이익의 개별 환수라는 한계를 보인다. 하지만 인간중심적 인식에 대한 반성과 비자본주의적 실천을 제안하는 시민단체로 인해 가치를 추구하는 질적 변모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섬진강이라는 경계공간은 개별화되고 구획화된 지역들을 커먼즈의 커머너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섬진강에서 발아된 변화가 하동의 지리산에서 만개하기를 기대한다. 하동의 지리산은 이미 이런 변화를 잠재태로 내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동의 악양면은 자본주의적 소유 욕망의 대상인 평사리와 함께 특히 지리산을 화해·생명의 공간으로 그려낸 소설 『토지』의 배경공간이다. 그리고 이 소설을 문화경관으로 활용하고 차시배지·야생차와 최참판댁을 결합하여 국제슬로시티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박경리(박경리문학관)라는 공동자원을 두고 여타 도시와 교류·협력하여 공동-개별화하는 커머너로 실천하고 있다. 각종 경계공간의 배치라는 위치성, 역사적 혹은 사후적으로 각인되어 내재된 장소성, 섬진강·박경리문학관을 통한 실천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동은 각종 경계공간을 커먼즈로 재인식함으로써 비교적 좁은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된 커먼즈 담론·운동의 확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민대 국사학과, 『우리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지리산문화권』, 역사공간, 2004.
- 권범철, 「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공간과 사회』 29(3), 한국공간환경학회, 2019.
- _____, 「커먼즈의 이론적 지형」, 『문화과학』 101, 문화과학사, 2020.봄.
- 김치완, 「로컬리티와 커먼즈 담론 공간에서 본 동학(東學)」, 『대동철학』 81, 대동철학회, 2017.
- 류석진 외, 「지역재생산관점의 로컬 커먼즈 구현 가능성 연구」, 『현대정치연구』 13(2),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20.
- 문선옥, 「국내 슬로시티의 경관 형성 특성에 관한 연구」, 『농촌건축』 13(3), 한국농촌건축학회, 2011.
- 문재원, 「지역문화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 36,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 민말순, 「21세기 창조와 네트워크 사회를 향한 하동군의 개발구상」, 『경남발전』 74, 경남발전연구원, 2005.
- 박규택, 「사이공간으로서 로컬리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3), 한국도시지리학회, 2016.
- 박동춘 · 이창숙, 「구례 지역과 화엄사의 차 문화에 관한 문헌 고찰」, 『정토학연구』 34, 한국정토학회, 2020.
- 박미경, 「하동세계차엑스포 구상과 개최전략 방안」, 『남도문화연구』 42,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2021.
- 박윤옥, 「지속가능한 농업유산과 박물관의 역할」, 『박물관학보』 34, 한국박물관학회, 2018.
- 박태현 · 이병천, 「자연자원의 집합적[또는 공동체적] 관리와 총유제(總有制)」, 『환경사회학연구 ECO』 21(1), 한국환경사회학회, 2017.
- 배용규 외,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복지수 개발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5), 한국도시설계학회, 2013.
- 백두주,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4), 한국지역개발학회, 2008.
- 손대현 · 장희정, 『슬로시티에 취하다』, 조선앤북, 2010.
- 신희석, 「슬로시티 심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주민의 환경인식」,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안새롬 · 윤순진, 「도시 커먼즈 운동의 의미」,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공간환경학회, 2018.

- 윤여일, 「축소형 사회의 도래와 현대총유론」, 『환경사회학연구 ECO』 22(1),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 이상진, 「자유와 생명의 공간, <토지>의 지리산」, 『현대소설연구』 37,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 _____, 「『토지』의 평사리 지역 형상화와 서사적 의미」, 『배달말』 37, 배달말학회, 2005.
- 이승윤, 「소설 『토지』에 나타난 모빌리티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72,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 _____, 『10개의 공간을 따라 읽는 소설 토지』, 앨피, 2021.
- 이승하, 「이 땅의 시인들은 경남 하동을 어떻게 노래했는가?」, 『하동문단』 16, (사)한국문인협회 하동지부, 2020.
- 이원재, 「'문화 커먼즈'와 공유성복원탁회의의 실험」, 『문화과학』 101, 문화과학사, 2020.
- 임숙연, 「차문화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장훈교, 『일을 되찾자: 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나뭇잎스, 2019.
- 전예진, 「『토지』의 여성이 겪는 트라우마와 공간 이동」, 『현대문학이론연구』 70,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 정남영, 「커먼즈 패러다임과 로컬리티의 문제」, 『로컬리티인문학』 1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5.
- 정명숙, 「문인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유형 연구」,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2013.
- 정영신, 「커먼즈와 커뮤니티 관계의 역사적 변동」, 『로컬리티인문학』 1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7.
- _____,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한국아시아학회, 2020.
- 정현기 편, 『한과 삶-〈토지〉 비평1』, 숲, 1994.
- 조명기, 「도시 정체성 재구성을 위한 전통 복원 양상과 곤경」, 『한국민족문화』 7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 _____, 「지역문화 정체성의 재구성을 위한 공간인식 층위의 교호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71, 한민족문화학회, 2020.
- 최원석,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청학동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4(6), 대한지리학회, 2009.
- 한상진, 「생태사회적 커먼즈를 향한 성찰과 관련 사례들」, 『환경사회학연구 ECO』 22(2), 한국환경사회학회, 2018.
- 이노우에 마코토 편, 최현 외 역, 『공동자원론의 도전』, 경인문화사, 2014.
- 데이비드 볼리어, 박현주 역,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2015.

- 데이비드 볼리어, 배수현 역,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2015.
- 실비아 페데리치 · 조지 카펜치스 · 권범철, 「자본주의에 맞선 그리고 넘어선 커먼즈」, 『문화과학』 101, 문화과학사, 2020.
- 제이 월재스퍼 엮음, 박현주 옮김,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검동소, 2013.
-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 Caffentzis, “The Future of ‘The Commons’: Neoliberalism’s ‘Plan B’ or the Original Disaccumulation of Capital?”, *New Formations* 69, Summer 2010, pp.23~41. 여기서는 권범철, 「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공간과 사회』 69, 한국공간환경학회, 2019, 23쪽에서 재인용.
- Schlager and Ostrom, “Property-Rights Regimes and Natural Resources: A Conceptual Analysis”, *Land Economics* 68(3), 1992, pp.249~262; Elinor Ostrom and Cole Daniel eds, *Property in Land and Other Resource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12. 여기서는 정영신,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한국아시아학회, 2020, 254쪽에서 재인용.
- 『경남뉴스투데이』, 2021.07.02.
<http://www.kn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18>
 (검색일: 2021.07.05.)
- 『경남도민일보』, 2021.06.15.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4159>
 (검색일: 2021.07.07.)
- 『경남신문』, 2008.06.28.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715469>
 (검색일: 2021.07.06.)
- 『광주일보』, 2021.02.04.
<http://kwangju.co.kr/article.php?aid=1612448100714124137>
 (검색일: 2021.07.08.)
- 『광주in』, 2020.10.23.,
<https://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27>
 (검색일: 2021.07.10.)
- 『남도일보』, 2020.08.13.,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071>
 (검색일: 2021.07.09.)
- 『뉴스1』, 2020.08.11., <https://www.news1.kr/articles/?4023185>
 (검색일: 2021.07.09.)

『데일리한국』, 2019.10.24.,
<http://daily.hankooki.com/lpage/entv/201910/dh20191024200314139030.htm>(검색일: 2021.07.05.)

『무등일보』, 2021.05.24. <http://www.mdilbo.com/detail/B1DoFP/645044>
 (검색일: 2021.07.07.)

『서울신문』, 2021.04.08.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9014003>
 (검색일: 2021.07.07.)

『시사저널』, 2021.03.24.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07>
 (검색일: 2021.07.07.)

『중앙일보』, 2020.08.10., <https://news.join.com/article/23845076>
 (검색일: 2021.07.10.)

『토목신문』, 2021.05.31.,
<http://www.c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32>
 (검색일: 2021.07.10.)

『한국경제』, 2020.02.1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21694181>
 (검색일: 2021.07.08.)

『한국경제』, 2020.12.1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1101951>
 (검색일: 2021.07.07.)

『현대불교신문』, 2005.05.01.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94>
 (검색일: 2021.07.06.)

『NEWSIS』, 2021.04.15.,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15_0001407525&cID=10899&pID=10800(검색일: 2021.07.09.)

『KNN』, 2016.07.07. <http://www.knn.co.kr/98435>(검색일: 2021.07.07.)
 「구례군민현장」, <https://www.gurye.go.kr/kr/subPage.do?menuNo=116007004000>(검색일: 2021.07.05.)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추진, 당장 멈춰라!!!」,
<http://kfem.or.kr/?p=208413>(검색일: 2021.07.08.)

김해 관광포털, <https://www.gimhae.go.kr/00510/00513/03740.web>
 (검색일: 2021.07.06.)

남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namwon.go.kr/index.do?menuCd=DOM_0000002050000000000(검색일: 2021.07.05.)

디지털하동문화대전, <http://hadong.grandculture.net/hadong/toc/GC03400195>
(검색일: 2021.07.05.)

보성군청 홈페이지, https://www.boseong.go.kr/tour/festivity/tea_aroma
(검색일: 2021.07.06.)

산청군청 홈페이지, <https://www.sancheong.go.kr/www/contents.do?key=168>
(검색일: 2021.07.05.)

양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yangsan.go.kr/tour/contents.do?mId=0308000000>
(검색일: 2021.07.06.)

하동군청 홈페이지, <https://www.hadong.go.kr/intro/00567/00578.web>
(검색일: 2021.07.05.)

함양군청 홈페이지, <https://www.hygn.go.kr/country/00780/00839.web>
(검색일: 2021.07.05.)

| Abstract |

Community Building and Possibility of Commons Extension - Focusing on Hadong-gun, Gyeongnam

Cho, Myung-K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 of re-regionalization of Hadong-gun in Gyeongnam and evaluate the possibility of a discussion on commons. The boundary of Hadong consists of nationally managed natural objects, such as Jirisan, Seomjingang, and the southern sea. This boundary is a spot in which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and the country's desire involves. On the other hand, the attitude toward Seomjingang, a boundary space, seems to be somewhat different from that toward Jirisan. The local governments along Seomjingang pursue reciprocal cooperation, rather than exclusive competition, as they experienced the common disaster, flood, in 2020. This project, however, has a limit, in that it is the capitalism-friendly commons and the interests of commons, the common goods, are individually retrieved, but it has potential to be qualitatively changed, due to civic organizations' activities including the reflection on human-centric perceptions and the proposition of non-capitalist practice. Jirisan located at Hadong is thought to already embed such a change as potentiality. The novel *Land*, a valuable cultural asset of Hadong, describes Pyeongsa-ri in Akyang-myeon, which wa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a slow city, as the object of capitalist possessive desire, while expressing Jirisan as the space for reconciliation and life. Hadong practices as an actor, and such a

practice means the capitalization of Park Gyeongri as a commoner, a common culture asset. Many cities commonly use her. Each of them, however, uses her in its own way, while the use of her is also beneficial to other cities.

Key Words: Hadong-gun, Gyeongnam, Commons, Jirisan, Seomgjingang, The novel *Land*

· 논문투고일: 2021년 8월 29일 · 심사완료일: 2021년 10월 20일 · 게재결정일: 2021년 10월 24일
